

## 맥주 소매점 판매 금지.. 불법 유통 우려

인도네시아 정부가 16일부터 미니마켓 및 편의점에서 알코올 함유 5%이하 주류 판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했다고 16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한편에서는 술 판매 제한으로 관광산업의 타격과 맥주 불법 유통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일명 아혹) 자카르타 주지사는 16일 “중앙정부의 규정을 따를 것”이라며 “하지만 이 규정의 시행으로 주류 불법 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룻 사이 폴 히다얏 자카르타 부지사는 술 판매 제한으로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룻 부시장은 편의점 술 판매 금지가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호텔이나 레스토랑,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술을 판매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 프랜차이즈 대변인 네넝 스리 물야피는 정부 규정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자사 매장 172개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슬람계 정당들이 지난 13일 술 판매와 음주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 법안을 상정한 정당 측에서는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레 후신 산업장관은 14일 “지금까지는 주류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에 책임을 물었고, 이제 소비자에게 책임을 물을 차례”라고 말했다.

### □ 시사점

－ 주류 관련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2015년 제 6호에 근거한 이번 주류 판매 금지 정책 시행은 최근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집권 이후 ‘마약 척결’을 외치며 마약사범 등 관련 문제에 강경 대응을 해 온 것과 맞물려 주류 판매에도 강경하게 대처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슬람정당인 번영정의당(PKS)과 통일개발당(PPP)이 주류 판매 전면금지 법안을 제출하면서 유통업계 및 주류업계, 관광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유통업자협회(Aprindo) 또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주류규제 정책 실행에 대해 굵힐 뜻이 없음을 공고히 함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주류품목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될 경우 관련 수출입 업체 및 유통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